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심사위원 명단 유출 '발칵'

담당 공무원 심의 하루 앞두고 농협·국민은행 양쪽에 넘겨줘

경찰, 윗선 개입·금품 거래 등 조사

30년 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뀐 광주 광산구의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심사 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. 광산구와 경찰은 윗선 개입 여부와 금품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 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.

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 (6급)씨가 심사위원 명단을 1금고 유치 경쟁에 나 선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 다. A씨가 명단을 넘긴 시점은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9명을 확정한 지난달 23일로 알려졌다. 명단만 건넨 국민은행과 달리 농협 측 으로부터는 당일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광산구는 확인했다.

A씨가 금전 이익을 대가로 은행에 심사위원 명단 을 넘겼는지, 구청 윗선도 개입했는지는 아직 드러 나지 않았다. 하지만, 광산구는 558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할 1금고 선정 심의과정 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.

광산구가 확인한 결과 명단유출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 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. 은행 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'잘 봐달라'는 말을 남기고 갔 다고 광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. 광산구 감사관실

은 19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, 심의위원(부구청장 ·국장 등 3명)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의 공정성과 외압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결과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다.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, 불공정 내 용 등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조 치를 취할 계획이다.

광주지방경찰청도 내사에 착수해 금고선정 과정 을 들여다보고 있다. 경찰은 A씨 등 담당 공무원 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하고,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. 경찰은 일부 심사위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참고인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

농협은 파문이 확산하자 입장 자료를 내어 "공무 원 A씨가 지난달 23일 밤 우리 직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먼저 해왔다"며 "당시 식사 접대는 없었으며 A씨가 국민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고 백했다"고 해명했다. 이어 "24일 오전 지역 조합장 등 10여명이 구청을 방문해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

고 사전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우리에게도 심 사위원 명단을 전달 했다"며 "명단은 국민은행에 먼 저 유출 됐다"고 주장했다.

한편, 광산구 제 1금고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 민은행으로 변경된 것을 놓고 농협이 불공정 평가 를 주장하며 법원에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 를 제출하는가 하면 농민단체가 벼 야적 시위를 벌 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

가족 함께하는 '첨단 과학 골든벨' 17일 국립광주과학관 제2기획전실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'제1회 첨단 과학 골든벨 대회'에 참가한 북구 관내 초등학교 5~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답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.

전남도-산시성 자매결연 사업

中인민대외우호협회 교류협력상

전남도는 중국 산시성(山西省)과의 자매결 연 사업으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주는 '교 류협력상'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.

시상은 지난 17일 중국 후베이성(湖北省) 우 한시(武漢市)에서 열린 '2018 중국 국제우호도 시대회'에서 했다. 지난 2014년 장시성(江西 省)과의 우호교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한데 이어 두번째다.

올해로 6회째인 국제우호도시대회는 중국 내 도시의 국제교류 지원과 국제협력사업을 강화 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린다. 이번 대회에는 중국 도시와 교류 성과가 우수한 해외 자매지역 80여 개 대표단, 중국 31개 광역자치단체와 15개 부 성급 도시 600여명이 참석했다.

전남도와 산시성은 2007년 우호교류를 시작 해 지난해 11월 자매결연을 맺었다.

두 지역은 지금까지 고위급 회담, 청소년 홈 스테이 교류, 지역 우수 농수산물 홍보전 개최, 에너지 박람회 및 국제수묵비엔날레 참가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. 특히, 지난 10월 산시성인민대표대회 교류단이 전남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의회 간 상호 방문을 통 해 교류 증진 및 농업 분야 기술교류 협력을 약 속하기도 했다.

전남도는 1993년 저장성을 시작으로 중국 지 방정부와 우호교류를 맺어왔다. 지금까지 저장 성·장시성·산시성 등 3곳과 자매결연을, 상하이 시・장쑤성・산둥성・후난성・쓰촨성・푸젠성・충칭 시 등 7곳과 우호교류를 맺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/박정욱 기자 jwpark@

광주시 미세먼지 '나쁨'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

주의 · 경보 발령시 종합상황실 운영

광주시가 초미세먼지가 '매우나쁨' (76µg/㎡) 수 준일 경우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'나쁨' (50µg/m³)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.

시는 지난 16일 시청 9층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에 서 자치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'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업기관 회의'를 개최하고 관 리 대책을 논의했다.

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에 나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무대로 등 27개 도 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. 근무시간에는 5개 자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2대 진공흡입차가 출동하고,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민간에서 보유한 살수차 를 임차해 오염이 심한 도로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.

초미세먼지 농도가 '매우 나쁨' (76µg/㎡) 이상으 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살수량을 증대

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고, 관급 공사장(14개소) 조업 단축, 민간 공사장(364개소) 조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다.

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을 대상으로는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민간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.

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책분과, 시민기업협력분과,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 이 참여하는 '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'도 구성 하고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.

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정책수 립은 물론 교육, 거리 홍보와 캠페인,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 등을 벌인다

이 밖에도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문 차량2부제 시행, 배 출가스 과다 경유차 운행 제한, 미세먼지 다량 배출 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광주형 지역화폐 카드상품권 우선협상대상자 광주은행

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지역화폐인 광주 사랑 카드상품권 운영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은행이 선정됐다.

'지역화폐(광주사랑 카드상품권) 사업'은 지역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매 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, 내 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5일 7명의 외부 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회를 개최했다. 평가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3개 업

부동산개발업체 사기분양·허위광고 '꼼짝 마!'

체의 제안을 평가해 광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

광주시는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 쳐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안을 마련하고,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
시 관계자는 "지역화폐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, 소상공 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 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광주시 45곳 30일까지 실태조사

광주시는 상가·오피스텔, 공장의 분양·임대 과정 에서 사기분양·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(45곳)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.

실태조사에서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 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.

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 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.

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7년 5월17 일 제정된 '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'에 따라 실시한다. 이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 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개발업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.

부동산개발업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 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

조성하거나, 건축물 등을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,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・임대하는 업종이 다. 건축물 연면적 3000㎡ 이상, 토지 5000㎡ 이상 을 개발할 때 관할 시·도에 등록해야 한다.

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(개인 6억 원), 전문인력 2명 이상, 사무실 확보 등이 갖춰져 야 하고,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미달 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.

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등 이 변경된 경우,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 정처분이 내려진다.

관련법령의 금지행위인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 발업 행위를 하거나,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·광고 위반, 거짓·과장 광고로 부동산 등을 매매·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받게 된다.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

폭력을 가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.

학교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랑 로그인 친구야 힘들지... 네 곁에 내가 있어... 혼자 고민 NO! 함께 나눠요~

학교폭력 신고는 117

🔭 광주광역시교육청 🦚 광주일보 👵